

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2084호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009호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08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08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5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49호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공보관실

공 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4009호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200만원)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공 고 명: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2. 11. 30. ~ 12. 14.(15일간)
- 공고대상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예정 내 용	비고
1	주식회사 포스*텍 [한 *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45번길 23(금곡동)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기술자 1인 부족] [산업기사 1인 부족]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200만원	

- 공고 대상자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대상자로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께서는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기간 후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 전기전력팀(☎ 032-440-4359)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08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320466	주식회사 아인스기술 대표 양병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25, 1층(만수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08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인천광역시장

☐ 등록변경 사항: 대표자 변경

등록번호	단체명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2020-0- 인천광역시 -10호	인천IP경영인 협의회	대표자	강춘식	유상운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49호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실현과 지역 물가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법령 취지 및 실정에 맞도록 정비 및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의 책무, 시장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한 기본 상황 명시(안 제2~5조)

나.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의 상담원 신분 현행화(안 제6조)

나. 인천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를 「인천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로 통합·정비(안 제10~18조)

다. 보조금 예산지원 범위 확대 및 평가사항 명문화(안 제19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경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구월동)
신관 경제정책과(1607호)

(2) 연락처 : 전화)032-440-4203, FAX) 032-440-8618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실현과 지역단위 물가안정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3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

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4.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매년 11월30일까지 소비자 시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소비자피해구제기구 설치) ① 시장은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소비생활센터(이하 "소비생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장 및 담당직원은 소비자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소비생활센터의 기능) ① 소비생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 시책 수립 및 추진
2.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의 처리
3.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소비자 문제 및 특수거래 관련 조사·연구
6.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의 역량 강화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 등에 대한 실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① 시장은 소비생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군·구 소비생활센터 지원) 시장은 군·구에서 소비생활센터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인천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소비자 권익증진과 물가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3.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시내버스·택시(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 및 도시철도 등의 교통요금 및 주차요금, 시에서 승인·고시하는 요금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4.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 안정, 소비생활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제3호 중의 도시가스 요금은 인상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 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의 경우와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본부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민안전본부장, 환경국장,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원

나. 소비자 및 물가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다. 경영 및 회계 분야의 전문가

라. 소비자 및 물가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 언론인

마. 그 밖에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10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개최 30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청취) 시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요금 중 교통요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9조(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학계,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2.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3. 소비자 교육 및 안전에 관한 사업
4.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사업
5. 지속가능한 소비실천을 위한 사업 등

② 시장은 영 제25조 2에 따라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소비자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